

제288호 (2010. 12. 13)

■ 경제 동향

- 11월 CBI, 주택경기 회복 조짐에 7개월만에 70선 회복

■ 정책·경영

- 국가기간교통망-‘저탄소 녹색교통’ 실현에 중점
- 공동주택감리제도, 대상공종 축소 및 통합감리 시행 시급
- “공공관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선 선택권 부여 필요”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란 : 새해 건설시장, 걱정되지만 기대도 크다

11월 CBSI, 주택경기 회복 조짐에 7개월만에 70선 회복

- 지수 자체는 기준선에 크게 못미쳐 여전히 부진, 12월에도 완만한 회복세 예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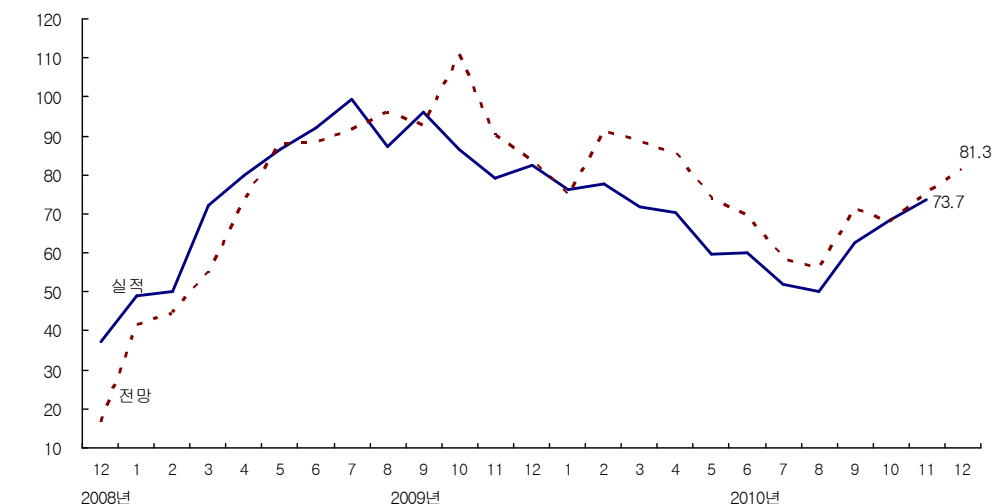
■ 11월 CBSI 전월비 5.2p 상승한 73.7 기록, 3개월 연속 상승

- 1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5.2p 상승한 73.7을 기록함.
 - 이로써 지수는 18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던 지난 8월(50.1) 이후 3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지난 4월(70.5) 이후 7개월만에 70선을 회복함.
 - 3개월 동안의 지수 상승 폭은 23.6p이며, 지수는 지난 2월 수준(77.6)에 근접
 - 11월의 지수 상승은 9~10월과 마찬가지로 8월 지수가 매우 부진한데 따른 통계적 반락, 통상 혹서기를 벗어난 이후 가을철에 상승세를 보이는 계절적 요인, 8.29대책 이후 주택경기 침체가 최악 상황을 지나 소폭 개선됨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판단됨.
 - 그러나, 3개월 연속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수 자체는 아직 75.6으로 기준선(100.0)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건설업체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침체된 상태임.

■ 12월 CBSI 전망치, 7.6p 상승한 81.3 기록

- 12월 CBSI 전망치는 11월 실적치 대비 7.6p 상승한 81.3을 기록. 이는 건설기업들이 11월에 이어 12월에도 건설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것을 의미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추이>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다만, 향후에도 공공 부문 수주 부진과 아파트 미입주 물량 적체에 따른 건설업체들의 유동성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택 경기 회복이 매우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통상 1월 이후에는 계절적 요인으로 지수가 하락할 가능성도 높아 향후 CBSI가 기준선 근접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대형/중견업체와 중소기업간 지수 양극화 다시 심화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중견업체지수가 전월비 큰 폭으로 상승해 11월 지수 상승을 주도했으며, 중소기업지수도 소폭 상승함.
- 대형업체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91.7을 기록했는데, 이는 대형업체지수의 경우 이미 지난 9~10월 동안 41.7p 급상승하며 지난 2월(92.9) 이후 8개월만에 90선을 회복해 가장 회복이 빨랐기 때문으로 판단됨.
- 중견업체지수는 전월비 11.5p 상승한 80.8을 기록해 지난 2월(80.0) 이후 9개월만에 다시 80선을 회복했으며, 11월 CBSI 상승을 주도함.
- 한편, 중소기업지수도 전월비 4.3p 상승해 44.6을 기록함. 그러나, 대형, 중견업체지수가 지난 7~8월의 저점(50.0, 57.1) 대비 급상승(41.7p, 23.7p 상승)한 반면, 중소기업지수는 지난 8월 저점(39.7) 대비 4.9p 상승에 그침.
- 결국 대형/중견업체와 중소기업간 지수 양극화 현상이 다시 심화됨. 이는 최근 주택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지만, 공공 발주 물량 침체 현상은 지속됨에 따라 공공공사 의존도가 매우 높은 중소기업의 체감경기 회복이 본격화되지 않은 결과로 판단됨.

<규모별·지역별 CBSI 추이>

구 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총 합		77.6	71.7	70.5	59.5	60.1	51.9	50.1	62.6	68.5	73.7	75.6	81.3
규모별	대형	92.9	78.6	80.0	64.3	69.2	50.0	50.0	71.4	91.7	91.7	100.0	100.0
	중견	80.0	70.4	63.0	63.0	57.1	57.1	59.3	69.2	69.2	80.8	76.9	84.0
	중소	56.9	65.0	67.9	50.0	52.6	48.3	39.7	44.8	40.4	44.6	45.6	56.4
지역별	서울	90.1	73.8	74.6	63.5	63.5	54.0	55.0	69.6	84.4	91.2	91.5	94.2
	지방	59.6	68.4	64.4	53.9	56.9	48.8	42.2	51.7	45.1	46.6	52.3	61.8

이통일(연구위원 · hilee@cerik.re.kr)

국가기간교통망-‘저탄소 녹색교통’ 실현에 중점

- 제2차 수정계획(안), 2011~20년까지 매년 18.5조원 투자 -

■ 철도, 해운, 그린카, 사람 중심의 ‘저탄소 녹색교통’ 실현에 중점

- 세계 일류수준의 교통기반시설 확충, 육상·해상·항공교통의 통합 네트워크 구축, 교통 물류활동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감축, 지속가능한 국가종합교통체계 구축을 목표로 함.

■ 철도 고속화 및 도로 기능 효율화 추진

- 고속철도의 적기완공, 기존선과 KTX 연계운행, 건설운영중인 철도노선의 고속화 등 추진
 - 경부고속철도(대전·대구 도심구간, '14년 완공),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 '14년 완공/광주~목포, '17년 완공),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 '14년 완공) 적기 완공 추진
 - 전라선, 경전선, 동해남부선 등 기존선 복선전철화 추진
 - 경춘선, 중앙선, 장항선, 군산선, 동해선 등 일부시설 개량으로 180~230km/h 고속화
 - 계획·설계 중인 노선을 250km/h 고속화하여 광역경제권간 90분대 통행권 구축
 - 철도역 주변 지역을 도시복합기능 중심지로 개발
- 간선도로망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로망 확충 및 도로 운영체계의 고도화 추진
 -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전국 반일생활권’ 및 ‘어디서나 30분 내 고속도로 접근’ 추진
 -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수도권 고속도로망계획(7×9+3R) 교통축 정립, 수도권 고속도로망 지선화 통합 및 중장기 투자계획 재정비
 - 도로의 단절구간 건설 추진으로 여객 및 화물의 이동성 향상

<교통시설 간 수송분담 구조>

구분	국내여객 비중(%)		국내화물 비중(%)	
	2008년	2020년	2008년	2020년
도로	81.4	69.1	71.1	58.8
철도	15.9	27.2	8.1	18.1
항공	2.5	3.3	0.1	0.1
해운	0.2	0.4	20.7	23.0

※ 본고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2011~2020년) 공청회(12.6)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음.

- 고속국도의 지속적인 보강(동서축 고속국도 사업에 집중 투자), 일반국도는 완공위주 사업 추진, 국대도·국지도는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등 간선도로망의 연계 추진
- 지능형교통체계 확충, ITS 구축 비율을 '12년 14%에서 '20년 25% 수준으로 제고

■ 교통수단 간 연계 환승체계 강화

- 복합환승센터의 개발로 연계환승체계를 강화, 고밀도 복합개발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 '15년까지 8개소 시범사업 추진
- KTX역과 주변지역의 대중교통연계 및 도로정비, 경전철·BRT·환승주차장 확충, 중심시가지 연계 추진
- 교통수단 간 연계 환승을 강화하기 위해 고속도로 환승정류소 확대, 다기능형 전국 호환 교통카드 개발 및 보급, 대중교통 정보시스템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 등 추진

■ 저탄소 녹색성장형 교통체계로 전환

-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으로 '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33~37% 감축
- 이를 위해 녹색물류 추진, 대중교통서비스 경쟁력 강화, 적극적 교통수요 감축, 자전거 및 보행교통 활성화, 미래형 교통기술 개발 및 구현 등 추진

■ 내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8.5조원 투자

- 안정적 재정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존속기한을 현행 '12년에서 '20년까지 연장이 필요하고 교통시설 신규 세원 발굴 필요

<부문별 투자규모 산정 결과>

구분	2011~2015		2016~2020		2011~2020	
	투자비(조원)	비중(%)	투자비(조원)	비중(%)	투자비(조원)	비중(%)
도로	34.14	36.5	38.19	41.5	72.34	39.0
철도	35.84	38.4	33.98	36.9	69.82	37.6
항만	10.42	11.2	7.41	8.0	17.83	9.6
공항	0.36	0.4	0.37	0.4	0.73	0.4
물류 및 기타	12.66	13.6	12.15	13.2	24.81	13.4
계	93.42	100.0	92.11	100.0	185.53	100.0

박웅석(연구위원 · yspark@cerik.re.kr)

공동주택감리제도, 대상공종 축소 및 통합감리 시행 시급

- 장기적으론 ‘자율적 품질관리 체제로의 전환’ 검토 필요 -

■ 공동주택 감리 환경의 변화

- 감리는 기술력과 전문성을 토대로 발주자를 대신하여 설계도서대로의 시공 여부와 공사를 종합적으로 조정·관리하는 업무로서, 1994년 4월 공동주택에 감리제도가 도입됨.
 - 최근 건축물 기능이 복합·다양화되고 기술이 고도화됨과 동시에 삶의 질과 연계되어 공동주택의 단순 품질 확보를 뛰어 넘어 주택 성능의 등급을 인정·보장하는 등 공동주택 감리 관련 환경이 크게 변화
- 주택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동주택감리제도 도입 이전에 비해 품질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업체가 9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공동주택 품질 향상의 원인으로는 ‘공동주택감리제도’보다는 ‘주택건설업체 시공 능력 향상’과 ‘주택건설업체의 브랜드 및 이미지 경영 효과’로 응답
 - 이는 현행 공동주택감리제도가 공동주택의 품질향상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감리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감리 제도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주택건설업체들의 제도 개선 요구로 판단됨.

■ 개선 방안

- 우선 관련 규정 미비로 통상적인 시공하자에 대해 시공자만 책임을 부담하고 감리원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고 시공자인 주택건설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
 - 일반적인 시공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와 연대책임을 지고, 감리자의 과실로 인한 재시공 등의 경우 시공자가 감리자에게 배상청구 가능토록 관련 규정 신설 필요
- 감리가 공종별로 독립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현장에서는 공종 상호간 협의·조정 곤란으로 인한 감리원간의 업무중복, 시공품질 저하, 건축시공 회사의 기업이미지

*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대한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주택건설공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공능력 순위 1~300위를 대상으로 두 차례(’10. 6. 28~7. 9, ’10. 9. 1~9. 14)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응답률은 18%임.

지 저하 및 금전적 손실, 공종별 충돌 사례 빈발

- 특히 공동주택감리제도 전체를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는 개별적인 제도 개선이 해당 감리 담당 부처 및 업역의 이해관계를 기초로 진행되어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관련 정책 및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 저하 등이 발생
- 공동도급방식 또는 종합감리업체 자격으로 감리입찰에 참여, 감리자로 선정시 종전의 공종별 다원화된 감리업무를 건축 감리자가 총괄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 필요
- 현행 공동주택 감리대상 75개 공종 중에는 기본선택품목과 같은 인테리어 관련 공사와 발코니 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이러한 공종들은 마감재 위주의 단순공종 및 규격재를 사용하고 있어 부실시공 발생 가능성이 적으며 마무리공사 과정의 보양 소홀, 가구 이동으로 인한 마감재 긁힘 등 인테리어 업자의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이 대부분으로 감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부적절
 - 현행 공동주택 감리 대상 중 발코니 확장공사와 2005년 「주택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감리대상에 다시 포함된 13개의 ‘경미한 공종’ 중 ‘기본선택품목’에 해당하는 8개 공사는 감리대상에서 제외해야 함.

■ 장기적으로 ‘자율적 품질관리 체계로의 전환’ 검토해야

- 단기적으로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되 감리대상 공종을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하고, 통합적 감리의 시행을 추진하며, 장기적으로는 업체의 ‘자율적 품질관리 체계’로의 전환 검토 필요
 - 자율적 ‘품질관리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그 효과를 검증하여 감리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은 감리업무에서 제외하거나 감리를 면제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
 - 또 감리제도의 도입 목적인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를 방지하는 다른 제도적 장치인 ‘주택성능등급제도’에 의해 고품질을 인정받거나 현재 국토부가 시행 중인 ‘주택품질 소비자 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사업장 또는 해당업체의 공사현장은 감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강운산(연구위원 · wskang@cerik.re.kr)

“공공관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선 선택권 부여 필요”

- 공공관리자 기능 재정립 및 분쟁처리시스템 구축도 시급 -

■ 정비사업 증가 추세, 공공관리 필요성 대두

- 그동안 정비사업은 그 추진과정에서 ‘복마전(伏魔殿)’이라 불릴 정도로 부정적 측면이 적지 않았음.
 - 주민이나 조합원의 피해는 물론 용산참사와 같은 사회 문제로 비화되는 경향도 있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다른 분야보다 시급하고 큰 편임.
- 정비사업의 개선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서울시를 중심으로 공공이 정비사업에 관여하는 ‘공공관리제도’가 도입됨.
 - 공공관리제도는 조합·시공사·정비업체 간 유착이나 선정과정의 부패, 추진위나 조합 등 추진 주체의 전문성 부족, 이해관계자 간 갈등 해소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 구체적 시행을 위한 법적 정비 진행

- 공공관리제도는 2010년 7월 15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을 통하여 법적 근거가 확보되었으며, 국토부는 시행을 위한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50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32호)’ 등을 마련함.
- 「도정법」에 의해 조례에 위임(법 제77조의4 제6항)된 사항은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87호)’, ‘공공관리 시공사 선정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26호)’,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275호)’ 등을 통해 구체화되어 있음.
- 다만,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나 부처간 협의, 시범사업의 실시·평가와 같은 검증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화가 급하게 진행되다보니 미비점이 적지 않음.
 - 서울시를 제외한 지자체에서는 지역별 사정과 준비 부족 등으로 자치법규의 정비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 몇 가지 근본적 문제점

- 세입자 보상이나 철거 등 핵심 사안은 주민(토지소유자)이나 시공자의 책임으로 돌려 놓고, 정비업체 선정·시공사 선정지원 등에만 공공관리자의 기능을 집중하고 있음.
- 현행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상시 운영이 되지 않고, 조정효력이 제한적이라 분쟁의 종국적 처리도 기대하기 힘들어 정비사업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실정임.
- 「도정법」상 시공업체 선정 시기는 조합 설립 이후이나,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사업시행 인가 이후로 늦춰짐에 따라 법령 적용 및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많음.
- 시범 실시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전 현장에 공공관리제도를 획일 시행함으로써 정비구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안정적 정착을 위한 보완 방안

- 공공관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공공관리자 기능의 재정립, 정비사업의 효율적 분쟁처리시스템 구축, 시공사 선정 시기에 대한 관련 법령의 명확화, 공공관리제도 적용에 대한 주민 또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택권 보장 등을 포함한 관련 법령의 정비가 이뤄져야 함.
 - 공공관리자의 주된 역할과 기능을 정비사업 관련 제반 필요정보의 신속·정확한 제공에 역점을 두어 실질적인 지원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조로 변경 필요
 - 분쟁의 경제적·효율적 처리를 위해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상시 운영체계 확보, 전문성 보강,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위한 조정효력 강화 등 실효성 제고 노력 필요
 - 시공사 선정시기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고 혼선과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정법」 개정 또는 조례의 위법성 여부를 조기 확정할 필요
 -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주민 또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여 사업 종료 후에도 공공이 과도한 책임논란에서 휘말리지 않도록 제도적 환경 정비 필요

두성규(연구위원 · skdoo@cerik.re.kr)

■ 주요 정부 부처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세미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12.6	국토해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정책과 주최 자문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연구위원 참여 - 최근 전세시장 동향과 전망에 대한 발제 및 자문
12.7	건협 서울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세대 건설CEO포럼 제4차 간담회’에 건설경제연구실 이홍일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자로 참여 - 향후 건설시장 전망 및 시사점에 대한 주제 발표
12.7	국토해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정책과 주최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위원회’에 건설경제연구실 두성규 실장이 심의위원으로 참여
12.9	공정거래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 규제심의회의에 건설산업연구실 이의섭 연구위원 참여 - 하도급법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안 심사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고용선도기업 육성 시범사업 협의체’ 회의에 건설산업연구실 심규범 연구위원 참여 - 참여 업체의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개선 의견에 대한 자문 수행
12.10	국토해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만 건설인 공감 워크숍에 건설산업연구실 강운산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자로 참여 - 항만건설 분야의 대·중소 건설업체 간 상생협력 구축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건설현장 노무관리 간담회의에 건설산업연구실 심규범 연구위원 참여 - 해외 현장 기능인력 고용 및 관리 논의
	홍희덕 의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건설산업연구실 심규범 연구위원 참여 -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역할과 공공기관 지칭의 타당성 검토에 대한 주제 발표

■ 연구원 발간물 현황

발간 형태	발간물명	주요 내용
이슈포커스	공공관리제도의 합리적 역할 수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관리제도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났던 조합·시공자·정비업체 간 유착이나 선정 과정의 부패, 추진 주체의 전문성 부족과 정비업체의 역량 부족, 각종 이해관계자 간 충돌이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 문제점으로는 공공관리제도의 도입취지와 기능 간의 괴리, 이해관계 충돌에 따른 각종 분쟁의 처리시스템 미진, 시공사 선정시기에 대한 법령 간 부조화, 주민 및 조합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공관리제도의 획일적 적용 등을 들 수 있음.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정비 업무의 지원 및 정보 제공에 공공관리의 주된 역할 부여, 정비사업의 효율적 분쟁처리시스템 구축, 시공사 선정시기에 대한 관련법령의 명확화, 공공관리제도 적용에 대한 주민 또는 조합원의 선택권 보장

새해 건설시장, 걱정되지만 기대도 크다

국내 건설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확대된 재정투자에 힘입어 늘어났던 공공공사 발주가 다시 축소되고 민간 건설경기 회복도 여전히 더디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내 건설시장 부진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우선 공공 토목수주가 SOC 예산 감소로 내년에도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SOC 예산은 4대강사업 예산을 제외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전인 2008년 수준이다. 본격적인 출구전략이 진행되는 것이다. 결국 공공 토목수주가 전년비 20%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내년도 공공 건축공사 수주는 토목공사와 달리 비교적 양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들이 내년부터 청사 발주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세종·혁신도시 이외 지역으로의 개별 이전 기관도 십 수 개인 것을 감안하면 내년도 공공부문의 비주거 건축공사 발주는 경상금액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민간 건설시장 특히, 주택시장도 내년에는 소폭이나마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아파트 입주물량이 크게 축소됨에 따라 그동안 건설사들이 택지를 확보하고도 분양을 연기해 왔던 아파트 분양 물량이 다소 증가할 것이다. 공공부문 주택 공급 역시 내년에는 소폭 증가해 주택 수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 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지만 올해 주택공사 발주물량이 극도로 위축된 것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발주물량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서울시의 공공관리자제도 시행으로 서울시 사업의 비중이 60~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수주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관리자제 시행으로 지난 10월 이후에는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 시기가 조합설립 이후에서 사업승인 이후로 늦어졌다. 통상 조합설립인가에서 사업승인까지 1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재개발·재건축 수주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볼 때 내년 국내 건설수주는 올해와 비교해 약 4.5% 감소하며, 2008년 이후 4년 연속 부진한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해외건설 수주가 내년에도 700억 달러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호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과 비교된다. 해외건설은 향후 3~4년 간 호조세를 지속할 전망이어서 향후에는 국내 건설업체들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해외 건설 공사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매출 순위도 뒤바뀔 것이다.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국내 건설시장도 주택시장 정상화, 그리고 SOC 예산 축소에 대응한 민자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조속히 정상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해본다. <아주경제, 2010년 12월 1일>

이종일(연구위원 · hilee@cerik.re.kr)